

시민단체, 시험문제 유출 엄정 대처 촉구

광주 5개 단체, 시교육청 앞서 기자회견 열어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기말고사 수학문제 일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 분야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엄정한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전교조 광주지부,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학

별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5개 단체는 9일 광주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시 비중이 높아지고 내신 성적이 핵심 전형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더욱 무겁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교육청의 학업 성적 관리와 감독의 한계가 노출됐고, 심지어 교육청이 고교 기숙사와 교육력 제고사업을 통해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한 교내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현실이 근본적 원인이고 대학 서열화와 입시 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대학의 서열이 곧 권력과 부(副)의 배경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체 고교 교무·학사 감사 ▲평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내신 관리지침 준수 ▲기숙사·교육력 제고사업·교내 경시대회 등을 통한 성적우수자 특혜 여부 ▲시험유출 의혹 학교 관계자 암발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당부했다. 최남규 기자

광주 대낮 두 살 배기 인질극 강도 3명
영장실질심사 앞서 ‘묵묵부답’

김씨는 범행 과정에 망을 봤으며, A씨가 은행 2곳에서 1575만 원을 대출 받아 집으로 돌아오자 돈을 빼앗아 조씨·한씨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는 4일 오후 3시15분까지 조씨·한씨에게 불집혀 있었으나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김모(34)·조모(30)·한모(27)씨를 호송차에 태워 광주지법으로 향했다.

이들은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은 두 살 배기 남자 아이를 인질로 잡은 이유와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가정집에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침입, 흉기로 생후 16개월 된 아이와 어머니 A씨를 위협해 귀금속 6점(300만 원 상당)과 15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한씨는 아이를 인질로 불집혀 뒤 A씨에게 스마트폰 앱으로 현금 서비스와 대출 신청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 도박비·비트코인 투자 탕진 또는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이 많았던 이들은 당초 금은방을 털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달 12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 수법을 따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관문을 열어 둔 채 방충망

만 저놓은 복도형 아파트의 여러 가구를 물색한 뒤 흉기 위협, 당보기 등 역할을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호박벌의 꽃비행 다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오후 경남 남해군 남해읍 인근 도로가에서 호박벌 한 마리가 고스모스 주위를 날아다니며 꿀을 따고 있다.

불법튜닝 등 눈감아준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 적발

환경·국토부, 271곳 특별점검 결과 발표

박 위원장은 “금호어울림 더피크는 15층 규모로 13층의 라송아파트 앞 42m의 근거리에 건축될 예정이다”며 “조망권 침해와 분진 소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주민설명회나 사업설명회 등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라송비대위는 행정소송과 공사금 지급분 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주민 전체 의견을 취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안다”며 “주민 민원이 우려돼 ‘작공 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사업계획서 승인 조건으로 해 지난달 18일 사업설명회가 열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주와 주민들 간 중재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차량 불법개조(튜닝)를 목인하거나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을 일삼던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무너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월 14일부터 한 달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중 1곳 꽂이다.

지난해 하반기(61곳)보다는 감소한 수치로, 특별단속 실시에 따라 단속기 관과 검사소 간 교육이 강화되면서 무지 또는 실수에 의한 위반 건수가 줄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위반 내용별로는 불법 튜닝과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건수가 32건(68%)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기기 부실 관리 9건(19%), 기록관리 미흡 3건(6%), 시설·장비·인력 지정기준 미족족 상태로 검사 시행 22건(4%), 타인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건(2%)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증에 따라 10~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다. 불법 행위에 기반한 기술인력 46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합격률은 84.2%로 교통공단의 72.9%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로, 전국에 총 1700여 곳이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여전히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여겨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단속 강화와 함께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이런 판결 저런 판결

‘교회서 4살 여아 폭행 사망’

여중생 징역 10년 구형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정말 잘못 했고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유아방에서 같이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사건 양형 조사 결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배경, 나이, 성행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양 변호인은 이날 “정신 지체가 있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전 가능성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이후 우울증에 걸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변호했다.

A양은 B양이 몸을 뒤척이는 등 자신의 수면을 방해하자 홍채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혁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불어
안녕이라 말을 다시 들키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건강 in
건강한 정부, 건강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증 자체조기발견
제발치료 충원 민혁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령에는 검진기준에 초월하거나, 미리 미리 결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 품선터 123 |

| 고객센터 1577-1000 |